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사회적 영향

이경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8월 9일, 현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과 건강위험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둘러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정책 관련 논쟁의 발생은 복지정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시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유상 공급과 무상 공급에 관한 논란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통한 복지정책 확대의 유효성 논란은 비단 현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경제 학계 전반에 걸친 오랜 고민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의 생활상 위험(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나 곤경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제도 혹은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¹⁾ 따라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은 빈곤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통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을 사회보장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심화일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개선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 간 통합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 및 그 부담 형태에 대해 이견이 생기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며,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과 투자의 위축,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감소 등 여러 형태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로 남게 된다.

이처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가져오는 명(明)과 암(暗)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복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확정적 결론이 도출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엄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호 기획특집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의 효과가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먼저 French 교수 등의 「부담적정보험법이 미국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시행이 건강보험 가입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우리와는 다른 민간 주도형 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국가개입의 정도를 강화한 의료보장정책이 노동시장에 어떠한 충격을 주는 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목표가 애초에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 수립에 있어 좋은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itao 교수의 「일본의 인구 고령화, 재정문제 및 연금 개혁」에서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양한 경제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개혁 필요성, 개혁 시기 및 구조의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개혁 문제는 저출산·고령

화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연금정책에 대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해외 경험들을 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최적해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찾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KLI**